

제418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24년9월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5)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3)

상정된 안건

- 의사진행발언 2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5) 5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0) 5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장 제출)(의안번호 2203923) 13

(14시12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뚝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14시17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입니다.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횡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

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알파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꿈을 써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문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에도 묻습니다.

왜 1년 지나도록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검법 처리에 방해가 될까 봐 결과를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이상합니다. 왜 민주당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살포하면서 생색을 내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입니다.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추어 지자체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인구감소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하는 국민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3분의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상품권이 아닌 차별상품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 박수 소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 주십시오.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 의원입니다.

배준영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조은희 의원님만 계시네요. 배준영 수석만 계시는데.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요.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날카로운 국민의 시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사와 관련된 협의는 여러 일정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안이 있을 경우에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현안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추석 전후를 통해서 지역에 가 봤더니 정말 경제가 어렵다, 물가는 고물가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판단한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회의를 열 때 12일로 열 것이냐, 추석 전에 열 것이냐, 19일 날 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하고 또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정책을 입법화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거고, 그 본회의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당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미국 대선 과정을 요즘 쪽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 큰 전략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제임스 카빌, 딕 모리스, 칼 로브, 액셀로드, 로저 스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위대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세 가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대중에게 멀어졌느냐?

첫 번째, 분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지역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이념 간의 갈라치기 이런 것을 하면서 갈라치기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주의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가지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딕 모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에 다녀 보셨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뭐니까? 무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무능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정부가 왜 실패하느냐? 저는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저희들 이번에 설 연휴 동안 다 다녀 봤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신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법안으로써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하고 가세요.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5)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0)

(14시2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성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외압 등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특검과 그리고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의롭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저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면 벌써 구속당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들어 보세요.

첫째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입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성운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이 수사 지휘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떨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어느 회사인지 특정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규정은, 법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입니다.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만 난무합니다.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 역사의 심판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안 부끄럽습니다.

이 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희가 공천 줬습니까! 김건희한테 비례 공천 받은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판사 출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장 우원식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것 모두가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 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 보시니 뭐라 합니까? 경제는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 났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낮부끄러워서 못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000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조작,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

런 검사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 있고 계좌가 들어 있고 그리고 수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매매 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 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것 같던데, 부인도 부자인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왜 받아 가지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국민권익위 아닙니까? 그것 숨겨 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손아귀에 쥐고 흔들면 이것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부인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에는 대통령관저 리모델링에 21그램인지 몇 그램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증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덜 떨던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 낱알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투표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동안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어야 될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정말 때 아닌 특검법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 2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쟁을 지양합시다. 과거 구한말 정쟁·당쟁에 몰입하다 나라 잃고 일제 치하를 겪은 우리 아닙니까? 당쟁·정쟁, 당장 즉각 중단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대통령하고 영부인한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왜 800-7070의 대통령실경호처 전화를 통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은 7월 31일에서 8월 21일까지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의 경호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왔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장관에게 다섯 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채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

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대법원장의 제삼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삼자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 저도의 추억을 낙서했습니다. 그 저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국민의 요망과 국민의 절절한 희망을 대통령은 수용하십시오.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검법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200명을 확보해서 재의결을 이룩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03923)

(14시5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정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박정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을 통합해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민생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 텅 비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국민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재 규정된 법률적 토대에 국가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이 당연하며 현행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더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도 국가의 책무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단순한 자치사무를 넘어선 국가사무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정부가 지방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자치사무임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할 때만 자치사무를 언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제화한 무수히 많은 입법 사례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243개 중에 191개, 거의 8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은 죽어 가는 내수경제를 살려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초갑 국회의원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참 나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입법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입니까?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벌써 9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국비로 감당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물론 지방사무, 국가사무 구분하지 않고 국비를 마구마구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요? 국가는 완전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짧게 다섯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입니다. 지자체 요구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예산 요구 의무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둘째,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21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딱 한 차례 국비 지원을 했고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히 납니다. 상품권 발행 지원은 현금성 소득 지원입니다.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적어서…… 대

체효과가 커서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소득 지원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점 만점에 19~36점이라는 겁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차별상품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53곳의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재정여력이 아주 큰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을 보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하시고 토론을 좀 들읍시다.

○조은희 의원 일반 지자체는 평균……

(「왜 거짓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하세요.

일반 지자체는 평균 1897억 원 발행하는데요. 그 반면에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382억 원입니다. 무려 5배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배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차별 화폐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400조, 여기다 더 없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포기하시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좋은 사람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들!

저는 700만의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 오세희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 보고 역장이 무너져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734만, 중소기업은 40만…… 779만 전 사업자의 95.1%가 소상공인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돼서 너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떨까요? 폐업률이 98만, 100만입니다. 그리고 내수침체 또 고금리, 정말 골목상권이 위기의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모든 게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5조입니다, 5조. 내년엔 5.5조. 그러면 그건 어디만 쓸 수 있지요?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쓰니까 확대를 합니다. 상점가, 백년가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소모를 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5.5 목표액만 했지 52%, 2조 240억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또 5.5를 한대요. 그게 뭐겠어요?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이렇게 현혹시켜도 되겠습니까? 지금 5조도 못 쓰는데 5.5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목표액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2조 240억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걸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골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2조 넘게 쓸 수 있는데 다른 골목상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 골목상권의 그분들은 아무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게 공정해야 됩니다. 2조가 온누리, 전부 다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2조, 저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몇 번을 제안합니다. 왜 전통시장만 그렇게, 쓰지도 못하는 금액으로 현혹을 시키냐 이거지요. 5조, 5조, 5.5 그 금액을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2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어떻게 현장을 모르는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금 골목상권이 얼마나 힘들어 가지고 있어요. 가게들마다 웨이팅도 기다리고 북적대고 손에 손잡고 가서 음식도 먹고 정말 그런 골목상권이 돼야 되는데 소외되는 골목상권…… 지역사랑상품권이 왜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여당이면 전부 다 골고루 정책을 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해야지 왜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렇게 정쟁의 정책으로 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 3000억입니다, 3000억.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5.5를 온누리로 한다는 거지요. 못 쓰는데 그냥 사람 현혹시키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5.5로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 목표액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여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골고루 살릴 수 있고 정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한테도 정말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또 국가경제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건 모든 가게가 다 쓸 수가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모든, 쓸 수 없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온누리만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골목상권은 아무런 수혜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아무 그런…… 없는 겁니다, 상품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지요.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은 내수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의욕을 살릴 수 있고, 꼭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오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항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출석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혜련	북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6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혜련	북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운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근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 회

○출장 의원(10인)

김성원 김준형 김태년 맹성규 박 정 윤상현 정태호 진선미 최형두 홍기원

○청가 의원(15인)

김 건 김석기 김승원 박균택 박상웅 박용갑 서왕진 서일준 양부남 윤준병
 정점식 정준호 정혜경 조 국 황운하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김 건	유영하	국민의힘	2024. 9. 12.

○의안 제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12.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1)

이상 4건 9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6)

이상 6건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8)

이상 2건 9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12.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12.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이상 5건 9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9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1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3)

이상 5건 9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이상 2건 9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이상 2건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이상 3건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이상 4건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8)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0)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1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이상 12건 9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9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민석) 징계안

(2024. 9. 12. 배준영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3998)

국회의원(박범계) 징계안

(2024. 9. 12. 배준영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3999)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2024. 9. 12. 배준영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40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4)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4. 9. 1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2024. 9. 13. 박성준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40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0)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 9. 13. 황운하 의원 제출)(의안번호 22040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1)

이상 5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 9. 11.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 9. 11.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9. 11.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3)

○의안 심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3.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8. 1.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8. 1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5.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8. 8.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3. 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5)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5.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1)

9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

(2024. 9. 12. 최동혁 외 137인으로부터 윤후덕·김기표·박정·복기왕·염태영·용혜인·윤종균·이소영·이연희·전용기·정성호·정준호·차지호·황운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9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질문서

(2024. 9. 12. 정을호 의원 제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질문서

(2024. 9. 12. 정을호 의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스탠포드센터 수정계약 및 의원실 무단녹음 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2024. 9. 13. 정진욱 의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스탠포드센터 수정계약 및 의원실 무단녹음 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2024. 9. 13. 정진욱 의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스탠포드센터 수정계약 및 의원실 무단녹음 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2024. 9. 13. 정진욱 의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스탠포드센터 수정계약 및 의원실 무단녹음 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2024. 9. 13. 정진욱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스탠포드센터 수정계약 및 의원실 무단녹음 행위 등에 관한 질문서

(2024. 9. 13. 정진욱 의원 제출)

9월 23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의 뉴라이트 논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4. 9. 13.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2024. 9. 12. 한국은행 제출)

9월 12일 정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